



# 2013년 국정감사

## 국 세 청 보도자료

새누리당 국회의원 류성걸 (대구 동구갑)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익원회관 607호 T. 02)784-3852 / F. 02)788-0269 / E. yoo575@hanmail.net

보도일시	2013. 10. 21.(월)~	담당자	박소희 비서
------	-------------------	-----	--------

### ▶ 세수부족에도 세무조사 줄었다. 그런데 기업들은 왜 힘들다 할까?

#### - 2013년 7월말 세수진도를 58.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세입 7.9조원 감소

☞ 세무조사 실적은 보면, 2013년 1~6월까지 3,385건(개인+법인)으로 전년 동기(3,986건)에 비해 601(3,986건)건이 감소되었고, 부과 금액대비 2,598억원 줄어.

### ▶ 또 나온 국세청 쇄신방안, 이번엔 제대로 될까?

#### - 1만 9천명의 직원들 중 최근 5년간 1만 8,127명 징계받은 국세청

☞ 2009년부터 적게 걷은 세금만 2조 882억원, 자체 징계(주의경고)를 가볍게 보는 풍토는 없어져야...

### ▶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세무조사 90건에서 4,941억원 추정

#### - 공공기관 1곳 당 54억 9천만원 추정, 그러나 기관명을 공개하지도 않고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평가에서도 배제되고 있어...

### ▶ 국세청, 정부 3.0 적극 활용하래

#### - 2010년부터 계속된 '외환감독기관협의회' 참가 기관의 자료요청에도 거부하다, 감사원 지적 받고나서야 검토에 나서...

☞ 2011년 1월 이후, 관세청은 국세청에 '역외탈세 자료'를, 국세청은 관세청에 '불법외환거래 자료'를 서로 각 5회 씩 요청하는 식의 기싸움으로 일관... 한국은행 '총액대출한도대출'지원과 지자체의 '지방세원 확보지원'에 동참해야...

### ▶ 장외주식에 대한 관리 적정한가?

#### - 부의 편법적 이전은 철저히 단속하되, 벤처캐피탈 생태 훼손은 안돼!

세무조사 활동은 줄었는데, 왜 기업들은 힘들어 할까?  
- 국세청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 □ 현황과 문제점

-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힘들어지면서 나라 곳간이 비어 가고 있음. 올해 7월말까지 정부의 국세 수입은 116.2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9조원이나 감소했음. 이것을 진도율로 보자면 58.5%로 전년(64.7%) 보다 6.2%p 저조한 실적임.

- 내수부진 등으로 간접세가 부진하고 법인세 신고실적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

2013년 7월 세수실적 (조 원, %)							
'12실적	'13예산	7월 누계실적			진도비		
		'12	'13	증감	'12	'13	증감
192.1	199.0	124.3	116.4	△7.9	64.7	58.5	△6.2

자료: 국세청

- 주요 세목별 실적,
  - 법인세는 2012년 영업실적 하락 등으로 법인세 확정 신고가 크게 감소 전년대비 △4.2조원
  - 부가세는 민간소비 둔화와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1.0조원

주요 세목별 세수분석 (조 원, %)								
	'12실적	'13예산	7월 누계실적			진도비		
			'12	'13	증감	'12	'13	증감
총 계	192.1	199.0	124.3	116.4	△7.9	64.7	58.5	△6.2
소득세	45.8	49.8	27.1	27.3	0.2	59.2	54.9	△4.3
법인세	45.9	46.0	26.4	22.2	△4.2	57.6	48.4	△9.2
부가세	55.7	56.6	42.3	41.3	△1.0	76.1	73.0	△3.1
기 타	44.7	46.6	28.5	25.6	△2.9	63.6	54.8	△8.8

- (세무조사의 오해) 세수 격감은 경제 어려움의 장기화로 제대로 낼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최근 세수에 비상이 걸린 정부가 탈세에 가려진 ‘숨은 세원’을 추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세수 목표를 맞추기 위해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다는 오해 또한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음.

- 세무조사 실적을 보면, 2013년 1~6월까지 3,385건(개인+법인)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601(3,986건)건이 오히려 감소됨(금액대비 △2,598억원)

세무조사 현황 비교

	'12년 실적			'13년 실적			6월 누계실적								
							'12년			'13년			증감		
	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계	개인	법인
건수	8,358	3,669	4,689	9,112	4,563	4,540	3,986	1,881	2,105	3,385	1,644	1,741	△601	△237	△364
세액 (억원)							30,223	3,864	26,359	27,625	3,507	24,118	△2,598	△357	△2,241

자료:국세청

## □ 질의 및 제언

질의 1) 2013년 7월말 현재, 세수 진도율이 58.5%로 전년(64.7%) 보다 6.2%p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2013년도 세수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으며, 세수 부족 최소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 목표에 맞추기 위해 기업들을 쥐어짜고 있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고 있음.  
세무조사를 많이 한다는 얘기인데,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비 2013년 6월 누계실적으로 보면 세무조사 건수와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금의 규모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맞는지?

질의 3) 그렇다면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 금액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기업들이 체감하는 정도가 강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라 보시는지?

질의 4) 세무조사에 대한 국민들과 기업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 (제언)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329억 7,8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였음. 기업들이 투자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한국에 투자를 안 하는 것임.  
사정당국의 지나친 '기업 때리기'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주장이 많으니 항상 이런 상황을 유념해 세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림.

## 또 나온 국세청 쇄신방안, 이번엔 제대로 될까?

- 5년간 자체 징계자만 18,127명, 빈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 -

## □ 현황과 문제점

- 국세청은 지난 8월 29일 김덕중 국세청장을 비롯한 전국 세무관서장 및 본·지방청 관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을 발표하였으나, 매년 반복되는 국세청의 비리와 쇄신안 발표에 국민들은 별반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음

- 역대 국세청장 18명 중 절반인 9명이 수사를 받거나 구속, 지난 3월에는 서울 지방국세청 조사팀 직원 9명이 세무조사를 빌미로 7개 기업으로 3억원 수수 적발
- 쇄신안은 ▲고위직의 대기업 관계자 사적 만남 금지 ▲고강도 감찰 등 고위공직자의 출선수범을 강조 ▲조사전제 기능 강화와 개혁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등을 담고 있음

참 고	8.29 국세행정 쇄신방안 주요 내용
<p>□ 국세청장을 포함한 고위직의 대기업 관계자 사적 만남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모든 기업과의 사적 만남을 스스로 자제, 특히 100대 기업·지주회사 관계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부적절한 사적 만남을 금지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li> </ul> <p>□ 고위직에 대한 고강도 감찰 및 의식변화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위공직자 감찰반」가동, 국세공무원행동강령에 고위공직자 청렴의무 신설, 외부인사 강연회·워크숍 개최, 절제된 생활 실천</li> </ul> <p>□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신설 등 조사 견제기능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신설, 세무조사 전반에 대해 심의·자문</li> <li>○ 순환조사대상 대기업 조사결과 전수 정밀검증, 범직심의 투명성 제고</li> </ul> <p>□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발족, 개혁의 구심체 역할 수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및 실무분과위 설치, 중장기 개혁방안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li> </ul> <p>□ 과세정보 공유 확대 등 정부3.0 적극 추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정보가 필요한 기관과의 적극적인 방문회의 등 협업 강화</li> </ul>	

○ (구조적 한계) 약 2만명 직원들 중 4급 과장이상은 1.8%에 불과함. 이러다보니, 국세청 내부에서 승진하려면 비정상적인 방법이 관행처럼 회자되어 왔으며, 여러 전문가들도 폐쇄적인 내부 구조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음.

- 2013년 9월 기준으로 국세청 총인원 1만 9,066명, 정무직 1명을 제외하고 고위공무원은 33명(0.2%), 3급 15명(0.1%), 4급 304명(1.5%), 5급 1,074명(5.4%), 6급 이하 17,639명으로 구성
- 승진경쟁 치열 → 각종 ‘라인’ 팽배 → 상명하복 고착 → 비리에 취약

○ (자정노력의 한계) 국세청은 큰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책을 내 놓았으나, 정작 달라진 것은 없음.

자정의 한계임 \*청렴서약 효력 상실

- 있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세무부조리와 그 때마다 내놓은 채신방안은 순간의 위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조직 내부의 깊은 성찰부족
-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만 해도 5년간 총 1만 8,127명, 세금을 적게 부과한 금액만 2조 882억원. 이중에는 다수의 봐주기식 행정처분도 포함 되었을 것

## 국세청 자체 감사결과

(명, 건, 억원)

연도	감 사 지 적				신 분 상 조 치			
	건 수	금 액			계	징 계	경 고	주 의
		계	과소부과	과다부과				
'13. 6	1,224	4,193	3,813	380	1,990	12	936	1,042
'12	2,541	6,698	5,684	1,014	4,348	42	1,809	2,497
'11	2,130	4,781	4,054	727	4,132	21	1,684	2,427
'10	2,215	4,959	4,094	865	4,099	33	1,689	2,377
'09	1,744	4,050	3,237	813	3,628	11	1,327	2,290
계	9,854	24,681	20,882	3,799	18,197	119	7,445	10,633

자료: 국세청

○ (개인정보 집중 우려)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 재원 135조원 중 27조원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할 계획임. 이를 위해 국세청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 거래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으며, 정부 3.0을 통해 각 공공기관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권한 만큼의 윤리의식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임

- 납세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세금도 제대로 못 걷으면서 국세청의 금융정보 접근에 대해 반발이 커지고, 납세자의 불만만 높아질 것

○ (8. 29 채신안) 국세청이 8월 29일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채신방안'을 내놓았음.

국세청 본청 및 지방청 국장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100대 기업 임직원과의 식사와 골프 등 접촉이 전면 금지되는 것이 핵심이나, '그런 식의 채신선언이나 청렴서약이 어디 한두 번이었냐'는 식의 반응이 주를 이룸

- 직무 외 민원인 접촉 금지, 골프 금지, 특별감찰반 신설, 정신교육 강화 등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국세청이 단골로 꺼내드는 채찍들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는 분위기
- 사적 접촉 금지, 실현 가능성 의문
-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실질적인 견제와 감독기능 원활한 수행 의문

## □ 질의 및 제언

○ 청렴서약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다양한 자구노력에도 국세청의 비리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져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질의 1) 국세청 직원들을 로비의 타깃으로 삼는 기업체에 대한 유형별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질의 2) 세무공무원의 범죄 및 소액수수 및 공여자 처벌 강화방안으로는 세무공무원의 직무 범죄에 대해 현행 조세범처벌법상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형법상 공무원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또한, 현재 처벌이 미약한 소액수수와 공여자에 대하여 해당 상당액의 일정배수(예: 10배 또는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하는 등 소액수수 행위와 공여행위에 대한 처벌수위 또한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음.

이와 관련해 징벌적 가중처벌을 내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질의 3) 국세청은 1만 9,000명의 직원 중 1.8%만이 4급 이상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보니, 내부 조직간 경쟁이 치열하고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조직으로 비리에 취약한 구조가 되어 버렸음.

국세청 내 경직된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방안은 가지고 계신지?

질의 4) 김덕중 청장이 취임하자마자 30명으로 구성된 '세무조사 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비리와의 단절을 선언했고, 한 번이라도 금품수수가 적발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분야에서 영원히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운영 중임.

그러나, 국세청의 역할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지속적이고, 보다 강력한 외부 견제가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5) 국세청 자체 감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2조 882억원의 세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과소 부과했고, 이들 사안을 포함해 징계받은 공무원만 해도 5년간 총 1만 8,127명으로 국세청 현원에 육박하는 수준임.

\*2009년 3,237억원, 2010년 4,049억원, 2011년 4,054억원, 2012년 5,684억원, 2013년 6월까지 3,813억원의 세금을 덜 걷었음

주의경고·정직 등의 처분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국세청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임.

정원 1만 9,000명의 조직에 5년간 징계받은 공무원이 1만 8,127명이라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임. 이에 청장의 견해는 ?

질의 6)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고액 현금거래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부여, 정부 3.0을 통한 공공정보의 공유 등으로 더욱 많은 정보를 집중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나, 이에 따르는 윤리의식이 뒷받침 되지 못한다면 문제임.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세정가 일각에서는 연이은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비리 추문으로 위기에 봉착한 국세청이 '최후의 자정(自靜)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8.29 쇄신안에 대해 여쭙겠음.

질의 7) CJ그룹의 세무조사 로비에서 보듯 국세청 고위직 인사와 대기업 간부들 간의 부적절한 만남이 결국 비리로 이어졌던 점에서 이들의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것이 쇄신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임.

국세청 간부들이 만나는 사람을 일일이 감시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동창회 등 사회 통념상 이해되는 범위 내의 만남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도 지연 학연 등 연줄 문화가 여전한 현실에서 보면 애매한 규정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8) 골프 금지, 특별감찰반 신설, 정신교육 강화 등은 비리가 터질 때마다 국세청이 단골로 꺼내드는 채찍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대한 견해는?

질의 9) 새로 설치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와 기존 「국세행정위원회」의 차이점 및 향후 운영 계획은?

○ (제언) 그 어떤 쇄신안보다 깨끗해지겠다는 각오와 실천의지가 없으면 '공염불'에 거칠 것임. 상명하복 문화도 개선해 비위에 대한 내부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청과 6개 지방 국세청, 111개의 세무서가 달라져야 함.

국세청장에게서부터 최일선 직원까지 1만 9,000명 세무공무원 각자의 생각을 바꾸는 것에서 '지하세정 개혁과 세정민주화 실천'은 시작되는 것임을 유념해 주시길 당부드림.

## 세무조사 받은 공공기관 1개당 평균 54억 9천만원 추정!

- 공공기관별 세무조사 결과를 기획재정부에 보고해 기관평가에 반영할 필요 -

### □ 현황과 문제점

- 공공기관은 중앙정부 공공부문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주체인 동시에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의 경계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통해 4,941억원의 세금을 추정당하는 등 정부의 관리가 소홀한 실정임.
- 2013년 1월 현재 기준으로 총 295개소가 공공기관 지정되어 있으며, 공기업 30개(시장형 공기업 14개, 준시장형 공기업 16개)고, 준정부기관이 87개(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7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70개)이며, 나머지 178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이루어짐
-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 대한 90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4,941억원의 세금을 추정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이것을 기관 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

공공기관 세무조사 건수 및 추정세액

(단위 : 건, 억원)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조사건수	18	10	25	22	15	90
추징세액	1,285	469	1,534	1,057	596	4,941
조사건수 당 추징세액	71.4	46.9	61.4	48.0	39.7	54.9

질의 1) 최근 5년간 이루어진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떤 사유로 실시되었으며, 세금 추정 이외에 고소·고발 건은 없었는지?

질의 2)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는 건수와 금액으로만 발표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도 납세자의 개인정보에 포함된다고 보시는지? 또한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3) 공공기관의 관리 운영에 대해 총괄하는 곳이 기획재정부임. 위 사실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공공기관 평가 항목에 세무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국세청, 정부 3.0 적극 활용하라!

- 공공정보 개방과 공유 활성화 가치 높다 -

### □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 3.0'을 추진 중임.
- 정부 3.0 관련 대통령 말씀(2013. 5. 13, 수석비서관 회의)  
“각 부처마다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국민들에게 공공정보를 개방할 것인가, 부처 간에는 어떻게 정보를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중점 추진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①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
	②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③ 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④ 정부 내 칸막이 해소
	⑤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시스템 개선
	⑥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⑦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⑧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⑨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⑩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 (칸막이 제거 소극적) 감사원이 지난 2013. 3. 6~ 4. 19일까지 공공정보의 대외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5개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세청은 자료 공유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음.

- 공적보험료와 세외수입 부과·징수(지자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민원인은 납세증명서 등을 직접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관공서 등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국세기본법」과 개별법률 등에 동 사유들에 대한 명시적(열거식)인 법적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과세정보 공유 거부



**과세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

4대 보험료 과소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4대 보험 관리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보험료 산정 기준인 소득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과세자료가 필요</li> <li>그러나 국세청에서는 4대 보험 관리기관에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4대 보험료가 제대로 부과되지 못하고 있음</li> </ul>
세외수입 과소 부과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세청에서는 일반 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에 따라 체납보험료의 징수를 위해 4대 보험 관리기관에 국세환급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역시 일반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따라 소송 절차의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검찰청에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과세 정보를 제공</li> <li>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는 세외수입 부과징수목적의 과세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아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어려움 발생</li> </ul>
행정서비스 질의 하락 및 국민 편의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정부법」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공동이용 대상으로 지정한 국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6종류의 과세정보가 2012년 일선 세무서와 홈택스를 통해 1,100만여 건이 발급되고 그중 50% 이상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인 관공서 및 은행 제출 용도인 것으로 분석됨</li> <li>공공기관 등이 위 과세정보를 공동활용할 경우 납세자 편의 및 행정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에도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의 하락 및 서류발급·제출 등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 발생</li> </ul>
국가승인통계 부실 작성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 통계(이하 “국가승인통계”라 한다)를 작성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르면 국가승인통계 작성 시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li> <li>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5호에 「통계청장」만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는 사유로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으로부터의 통계작성에 필요한 과세정보 제공 요구를 거부</li> <li>이에 따라 한국은행 등의 국가승인통계 작성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자료 등으로 ‘국제수지 편제’ 등의 통계를 작성하고 있어 통계의 신뢰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li> </ul>

○ (불법외환거래 자료 공유) 국세청에서는 「외환거래법」 제16조 내지 제17조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불법 외환거래 조사 자료가 과세자료로 유용하니, 이것을 ‘외환감독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출해 달라고 2011년 1월 21일과 같은 해 9월 8일 등 5차례에 걸쳐 관세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음

- 국세청에 제공되지 않은 5년간의 국외재산도파·자금세탁 조사자료 전체에 대한 탈세여부를 점검한다면 5년간 총 2,103억원(매년 421억원) 정도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역외탈세자료 공유)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조사를 통해 2012년 8,258억원 이상의 세액을 추징한 바 있으며, 매년 추징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한편, 관세청에서는 국세청이 보유한 역외탈세 조사자료가 불법 외환거래 단속업무에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11년 1월 21일과 같은 해 9월 8일 등 5차례에 걸쳐 ‘외환감독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역외탈세 조사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국세청에 요청한 바 있으나, 정보공유가 안 되고 있음

\* 외환감독기관 협의회: 외환업무 공조를 위해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의 담당과장과 실무자 1명이 구성원이 되어 2010년 5월 14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2013년 4월까지 8차례 회의 개최

- 2012년 국세청의 역외탈세 자료 87건을 분석한 결과, 17개 업체가 재산 국외도파·불법투자·자금세탁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현황

(단위: 건, 억 원)

연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계
건수	95	156	202	453
추징세액	5,019	9,637	8,258	22,914

자료: 국세청 자료 재구성

○ (한국은행과의 공유)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정보를 수집하고, 홈택스를 통해 누구나 특정사업자의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면 폐업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행이 ‘총액한도 대출제도’를 운영하며, 대출 제한 기업에 해당하는 폐업업체 자료에 대해 일괄 조회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세청은 거부하고 있음.

\* 총액한도 대출(2013년 2월말 기준), 중소기업 지원대상으로 65만건, 잔액기준으로 106조원 대출 중

-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대출세칙」 제4조와 제5조, 총액한도 대출지원 대상에서 대기업·부도업체·폐업업체 제외

· 금융감독원은 ‘주채무 계열업체 명단’, 은행연합회의 ‘최종 부도업체 명단’을 일괄 한국은행에게 제공하고 있으나, 국세청은 거부

○ (지방과의 과세정보 공유) 최근 들어 지방의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과세정보의 정확한 과세정보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함.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가액명세서’, ‘미등기 양도자산 과세정보’, ‘골프

회원권 등 명의개서 자료'의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세정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부동산 임대가액명세서**: ‘창업 중소기업’ 등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사업용 재산을 다른 용도를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한 사후 관리에 필요
- **미등기 양도자산 과세정보**: 자산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등 자산을 취득자가 취득사항을 신고·등기 하지 않은 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해당 자산의 취득·양도여부 등을 알 수 없어,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자산세,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음
- **골프회원권 등 명의개서 자료**: 국세청은 명의개서 자료를 활용해 증여상속세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사실을 알 수 없어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에서 누락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추이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재정자립도(%)	53.9	53.6	52.2	51.9	51.1

자료 : 안전행정부

### □ 질의 및 정책제언

- (국세청과 관세청의 힘겨루기) 국세청과 관세청은 각각 ‘역외탈세 조사’와 ‘국의 재산도 파·자금세탁 조사’를 통해 문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과세당국 간 칸막이를 두텁게 쳐 두고 있어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음을 감사원이 지적했음.

질의 1) 외환감독협의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이며, 동 협의회를 통해 2년간 국세청은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을 얻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감사원의 지적 이후, 지난 9월 2일에서야 국세청과 관세청은 역외탈세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지금까지 관세청에 ‘역외탈세 조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한국은행과의 자료공유)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저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는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음. 그러나 동 자금의 부실 대출 문제(폐업기업·대기업에 지원)로 국회로부터 매년 지적되고 있는 실정임.

질의 3) 사업자의 폐업정보는 현재도 홈텍스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한 정보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에 따른 비밀유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질의 4) 국세청은 홈텍스를 통해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65만건(1건당 30초 소요 시 5,417시간(225일) 필요)에 달하는 심사대상 대출업체의 사업자 번호를 일일이 입력하는 것은 능률적이지 못함.  
정부 전체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라도 국세청은 요청이 있을 시 자료제출에 응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중소기업 금융지원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2012. 4)에서 폐업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이 1.5조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 (지방자치단체와 과세정보 교류) 국세와 지방세 간 정보공유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세정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가액명세서’, ‘미등기 양도자산 과세정보’, ‘골프 회원권 등 명의개서 자료’의 공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질의 5)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제1항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조항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질의 6)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가액명세서’, ‘미등기 양도자산 과세정보’, ‘골프 회원권 등 명의개서서’에 대한 기본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국세-지방세 과세당국 간 협력강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외 거래된 주식에 대한 관리가 적정한가?

- 부의 편법적 상속은 철저히 단속하되, 벤처캐피털의 생태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

### □ 현황과 문제점

○ 정부는 주식 등 자본거래가 편법적인 부의 이전 또는 세 부담 없는 자본이득의 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2004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특정 기업들은 편법적인 주식이동을 통하여 2세에게 사전상속이나 경영권을 이전하면서 정상적인 세금을 회피하는 일이 발생되고 있음.

- 최근 A.B 그룹의 사주는 자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비상장회사에 주식을 증여하거나, 계열사들을 동원해 수익성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을 몰아주거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이전하고 320여억원의 증여세 회피

#### 완전포괄주의 도입에 따른 과세범위 확대

재산의 무상이전						
상속세		증여세				
민법상 상속	민법상 증여		종전 증여의제(14가)·추정(2가)			새로운 유형
· 상속 · 연고자에 대한 분여 · 유증	· 사민증여	계약에 의한 재산의 직접이전 (상증법 §2 ①)	일반거래를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 (10가지)	자본거래를 통한 재산의 무상이전 (6가지)	현행 증여의제 유형과 유사한 경우 (상증법 §39 ① 3호·§40 ① 3호)	형식 등에 관계 없이 재산의 직접 간접 무상이전 (상증법 §2 ③·§42)
〈증여세 과세유형〉		포괄주의	← 열거주의 →			
			← 유형별 포괄주의 →			
			← 완전포괄주의 →			

자료: 국세청

○ (장외주식 거래 대두) ○○생명(상장일 '10. 5. 12.)의 상장이 가시화되던 '09년에 주가 급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일반인의 장외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기 시작하였음

\*장외주식은 대부분 상장을 준비하는 주식으로 증권 계좌 간 대체거래가 가능한 주권이며, 별도의 거래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서 개인 간에 직접 거래로 이루어짐

- 최근에는 개인 간의 거래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장외시장 주식을 거래하는 증권사의 거래중개 서비스를 통해 거래가 활발하며 그 규모가 확대 추세임

- 현재 코스피 및 코스닥에서 거래되는 종목들도 처음에는 대부분 장외주식으로 출발하였으며,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 상장 전 장외주식으로 활발히 거래되는 것이 특징임

\* [한국경제TV, 2011.5.23자] 「증권사 장외주식 중개 '돈 되네」 인터넷 기사

· '11.4월 장외주식 중개사업을 시작한 ○○투자증권의 담당 부장 인터뷰에서 하루평균 거래금액은 15억원 이상  
· '10.4월 장외주식 중개사업을 시작한 ○○증권도 1년만에 비상장 주식거래고객만 3,500명으로 늘었으며, 큰 손들의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 하루에만 100억원이 넘는 거래가 성사되기도 함

○ (장외시장 관리 시스템 부재) 장외주식들은 장외주식시장을 통한 편법거래에 의해 사전 상속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국세청의 사전 대응 미흡으로 관련 시스템의 구축 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2013년 1월 1일 증권거래세법 개정, 증권회사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권 등을 장외거래한 경우 그 자료의 국세청 제출을 의무화하여 양도(상속증여), 증권거래세 과세 시작

-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장외시장에서의 편법 거래를 관리하기 위한 자료 수집 능력 배양과 시스템 구축이 완비되지 못한 실정임

#### <증권거래세법>

##### 제9조의2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을 이체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체내역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3.1.1일 개정)

○ (증권거래법상의 한계) 당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에는 증권사는 양도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증권사의 계좌를 통한 “이체거래”에 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상속 등이 포함된 과도한 자료 수집이라는 의견에 따라 “양도”자료만 제출하도록 결정함.

- 개정 법률에 따라 증권사들은 계좌를 통하여 “양도”한 경우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나, 양도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가 없어 법의 실효성이 상실될 위기에 놓임



## □ 질의 및 제언

- 비상장 주식이 거래되는 장외시장은 언제부터인가 대기업 집단이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으나, 과세당국의 대응은 아직 쟁점에 불과한 수준임

질의 1) 청장께서는 장외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가?

질의 2) 장외시장은 중소기업이나 벤처캐피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팔아 자금을 마련하던 곳이었음. 이것이 언제부터가 대기업 집단들의 부의 세습과 세 부담 없는 자금 축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장외시장 관리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지, 없다면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증권사를 통한 자료 수집) 장외거래 정보는 현재 증권사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으로 수집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상속 등이 포함된 과도한 자료 수집이란 비판이 있음

질의 3)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장외시장에 대한 거래 정보 중 ‘양도’에 관련된 사항만 증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증권사가 ‘양도’에 대한 개념을 명확한 근거 없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은?

질의 4) 장외시장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님.

중소기업과 벤처캐피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자금을 확보하는 시장으로 긍정적 역할을 해 왔던 것도 사실임

세금 부담과 신분 노출을 꺼리는 ‘큰손’들이 장외시장을 떠나면서 거래가 급속히 줄어들어 장외시장에서 보유 주식을 팔아 투자금의 일정 부분을 회수해 온 벤처캐피털은 회수 창구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은?

